

한빛원전·여수산단 드론공격 무방비 노출

국내원전 올 드론 출몰 10건 중 7건 이륙 지점조차 몰라 사우디 드론테러 현실화에 "방호시스템 서둘러야" 목소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드론 폭탄테러를 계기로 영광 한빛원전지력발전소와 여수 화력산단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무인기 방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생활영역에 배치돼 있는 이들 시설의 경우 테러 발생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지만, 드론 방어장비 등이 배치되는 개발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13건이다. 이중 10건이 올해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드론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등 두차례 발견됐다.

하지만 현 방호시스템과 기술력으로는 드론을 막아내는커녕 조종자와 조정 목적, 드론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올해 발견된 10건 중 7건도 사실상 원점(드론 이륙지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한빛원전의 경우는 2017년 사건은 원전으로부터 8km 떨어진 영광 백수읍에서 드론을 날리던 조종사가 확인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발견된 드론은 조종자의 행방도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가'급

으로 분류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 고도 3km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원전 상공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드론 식별이나 격추 장비조차 없어 원전 인근 지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빛원전과 마찬가지로 중요 국가보호 시설로 지정된 여수 화력산단이나 광양 제철소도 드론에 대한 방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들 지역도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특히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활용한 원유 시설의 폭탄 테러가 현실화되면서 전남 등 국내에서도 드론 방호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순찰(수색) 강화, 드론 방어 장비(레이더·주파수탐지기·휴대용 주파수차단기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전파교란 등 대응 기술은 한계가 있다. 한수원이 조 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주파수차단기(Jammer)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 드론 출몰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원전이나 국가시설이 드론공격을 당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방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새봉 관통 순환도로 개설 안된다” 16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보호를 위해 북부 일곡동 한새봉을 우회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공중시설 금연구역 흡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140만 개가 지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10m 이내 구역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중시설 금연구역 흡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 사료 확보
광산매물 진상 밝히고 피해자 지원

김일수는 이 같은 활동 과정에서 중국인은 물론 일본인들의 신뢰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해방 직후 일본 땅에서 일본제국주의 정부가 경찰을 투입하는 등 방해공작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조선인이 앞장서 피해자 지원활동과 한·중·일 노동자 연대를 이끈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 징용자들 해방후 일본 노동운동 이끌었다

전남의 한 대학교수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노동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방 이후 일본에서 한·중·일 노동자들과 연대해 노동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해방 전 일본 하나

오카현 광산에서 한중일 노동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고 연대한 사실은 김 교수의 논문 등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바 있다.

최근 김 교수는 조선인 강제 징용자였던 이우봉씨가 쓴 증언록 ‘재일 1세가 증언한다’를 입수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다는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동안 시판되지 않았던 이 증언록에 따

르면 해방 후인 1947년 하나오카 자유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선인 김일수가 한·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자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이우봉은 서기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김일수는 광산 봉기로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매몰돼 사망했던 ‘하나오카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 증언록에 따르면 이우봉은 해방 후 일본에서 한·중·일 노동자들과 연대해 노동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해방 전 일본 하나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38, 달뜨기 20:29, 달지기 08:42

낮에는 더워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음.

광주	맑음	19/29	보성	맑음	15/27
목포	맑음	20/27	순천	맑음	17/29
여수	맑음	20/27	영광	맑음	18/28
나주	맑음	17/29	진도	맑음	19/27
완도	맑음	19/28	전주	맑음	17/29
구례	맑음	16/29	군산	맑음	18/28
강진	맑음	18/28	남원	맑음	16/28
해남	맑음	16/28	흑산도	맑음	19/24
장성	맑음	16/2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안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안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안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서부안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5~3.0
남해서부안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9:08, 21:20	03:58, 16:14
여수	04:27, 16:37	10:42, 22:53

◇주간 날씨

날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
기온	18/27	15/26	16/26	16/25	16/25	16/25	15/25

고의로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10월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800여곳이다.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는 건설업(25.4%)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사업장(44.1%)과 5인 미만 사업장(41.8%)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배개·속옷·소파 등 수거 명령

국내에서 시판중인 배개·속옷 등 가전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에이치비에스라이프, 네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 가전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적발된 제품 중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판매한 황토 패드에서는 안전기준의 30배(29.74Sv)에 이르는 라돈이,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판매한 배개에서는 9.95Sv, 어싱플러스의 매트 제품에서는 최대 6.57Sv의 라돈이 검출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